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된 24일 오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여의도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투표율이 표시된 모니터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무상급식·국가 복지정책 어떻게 되나

서울 내년 중학교까지 확대여부 관심

힘받은 ‘보편적 복지’... 정책변화 예고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개표도 하지 못한 채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복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표는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1안)과 ‘소득 구분없이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 무상급식(2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투표함을 열지 못해 1안과 2안 모두 부결됐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는 현행대로 급식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초등학교 1~3학년과 서울시 21개 자치구 돈으로 총당하고 있는 4학년의 경우 지금처럼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문제는 과도한 서울시교육감이 공약한 대로 초교 5~6학년까지 혜택을 늘리고 내년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언제 치러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국가의 복지정책에도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무상급식뿐 아니라 무상보육 등 복지확대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복지정책을 검토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이날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번 주민투표는 ‘대한민국이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정부·여당은 이제 ‘보편적 복지’를 조건 없이 수용하고 더 이상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면서 사회 혼란과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보는 전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주민투표 결과가 향후 국정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놓고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투표 결과는 향후 복지 패러다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어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자중지란... 혼돈 소용돌이 속으로 野 기세등등... 여세 몰아 야권대통합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됨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여야 내부의 역학구조는 물론이고 10월 재보선과 길게는 내년 총선과 대선도 직간접적 영향권에 놓이게 됐다.

◇야권=주민투표 무산의 충격파는 여권 전체를 대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내몰고 있다.

당장 주민투표에 패배한 오 시장의 중도 하차가 확실시되면서 보궐선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고, 이는 총선과 대선 국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야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 무산이 민주당의 방해 때문이라고 ‘책임론’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별다른 반향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주민투표 무산으로 여

■ 정국 어디로... 내년 총·대선 메가톤급 후폭풍

권의 정국 주도권이 상당 부분 약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당력을 총동원한데다 청와대도 측면 지원에 나섰다 때문이다.

한나라당 내부적으로는 주민투표를 지원한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 경우 자중지란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서울시 의회에 이어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직까지 야당에 내 줄 경우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 가속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여권은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총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으로 넘겨야 한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유동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야권=주민투표 거부운동을 주도해 온 민주당 등 야권은 크게 고무된 입장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최대 화두로 떠오른 복지 이슈를 확실하게 선점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지지부진한

야권대통합에도 계기가 마련됐다.

야권에서는 여세를 몰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승리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여론의 흐름이 야권에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오는 10월 26일에 치러질 수 있도록 한나라당 등 여권을 강하게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민투표 무산으로 민주당 등 야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당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나타난 민심

이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같은 흐름은 내년 총선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자체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지지를 정체를 보이고 있는 야권 대선 주자군들도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상승세를 보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민투표 무산 결과는 민주당 등 야권에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며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야권단일후보를 내세워 승리하고 이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법적 공방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끝났지만 이와 관련된 각종 소송과 고발이 남아 있어 후유증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현재 행정법원·헌법재판소·대법원 등에 여러 소송이 계류 중인 데다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큰 상태다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대 법정 공방=이날 현재 ▲주민투표 수리 위법예 대한 본안 소송 ▲무상급식조례 무효 소송 ▲현재의

무상급식 조례 무효소 등 후유증 계속

권한쟁의심판 등이 가장 핵심적 사안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우선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낸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2심까지 기각된 상태고 본안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아 개표가 이뤄지지 않아 이 소송은 실제 별 의미가 없게 됐다.

때문에 지난 1월 서울시가 대법원에 낸 ‘무상급식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이 이 조례를 무효로 판단하면 당장 정책을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돼 무상급식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도 법률적으로 조례의 위법성만 문제 삼는 것이어서 주민투표로 결정된 무상급식 정책의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면 시의회가 다시 조례를 만들면 되기 때문이다.

또 ‘무상급식’에 대해 결정권이 없는 서울시가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서울시

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도 결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진행된 투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고발 사건=대검찰청 공안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고발사건이 총 10건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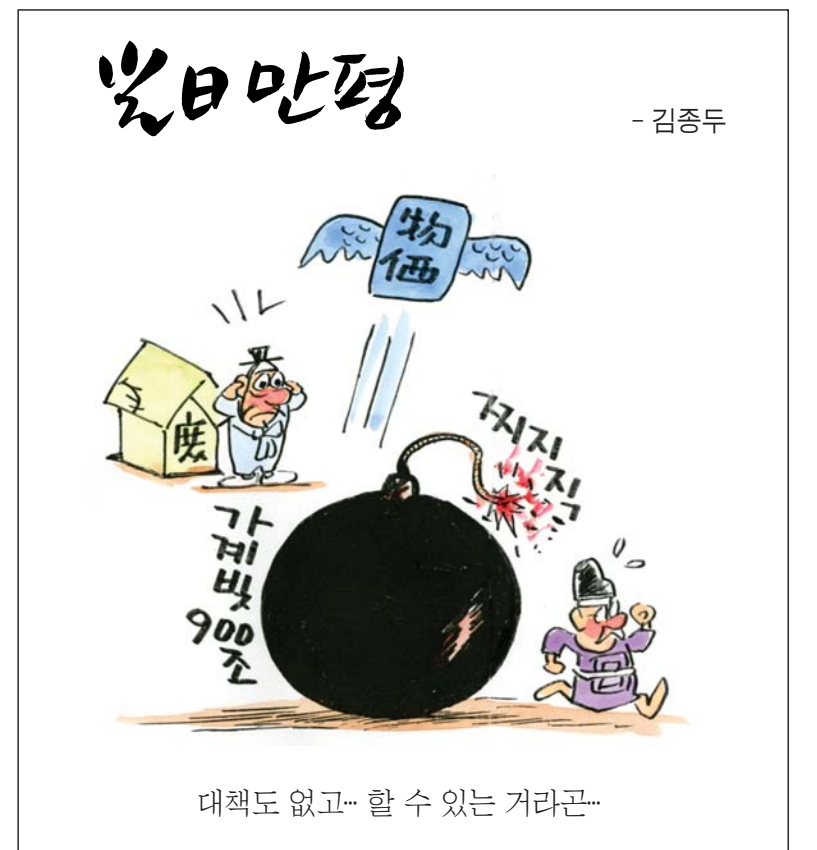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내 통상임금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특정안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과 주민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보낸 서울시교육청 담당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1인 시위를 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반면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투표 거부를 표방하면서도 ‘전면적 무상급식’안을 지지하겠다고 대표단체 지정을 신청, 등록한 것은 시 선관위를 속인 것이라며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를 고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IT-광융합 실무과정) 교육생 모집. 지원자격, 연수생 혜택, 신청방법, 연수내용, 교육상담 및 문의.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동구청, 조선이공대학.